

독일 통일 전후 방송통신 역할조사 출장 결과 보고서

◆ 기 간 : '14. 9. 1(월) ~ 9. 6(토)

◆ 방문지역 : 독일 (베를린, 라이프찌히, 마인츠)

2014. 10.



홍보협력담당관

목 차

I. 출장 개요	1
II. 면담 결과	2
1.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2
2.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6
3. 신탁청 前 이사	8
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MABB)	12
5. 연방네트워크청 라이프찌히	16
6. 중부독일공영방송(MDR)	19
7. 독일 제2공영방송(ZDF)	23

독일 통일 전후 방송통신 역할조사

출장 개요

- 출장기간 : 2014. 9. 1(월) ~ 6(토), 4박 6일
- 출 장 지 : 독일(베를린, 라이프찌히, 마인츠)
- 방문기관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신탁청 前 이사,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MABB)
연방네트워크청 라이프찌히, 중부독일공영방송(MDR)
독일 제2공영방송(ZDF)
- 출장자
 - 방통위 : 허원제 부위원장, 박명진 국제협력팀장, 장좌영 주무관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김영준 선임연구원
- 주요 일정
 - 9. 2(화) : RBB,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방문 면담
 - 9. 3(수) : 신탁청 前 이사, MABB 방문 면담
 - 9. 4(목) : 연방네트워크청 라이프찌히, MDR 방문 면담
 - 9. 5(금) : ZDF 방문 면담

면담 결과

1.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 일시/장소 : 2014.9.2 09:00~11:00, RBB Inforadio 회의실(베를린 소재)

□ 면담자 : David Biesinger RBB 정보국장 겸 Inforadio 편성부장 등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방송(RBB) 개요 >

○ 브란덴부르크를 권역으로 하는 동부독일방송(ORB)과 베를린을 권역으로 하는 자유베를린방송(SFB)의 합작으로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에서 1995년 8월 28일 첫 방송을 개시하였으며 독일 제1공영방송(ARD)의 지역방송에 해당

- 현재 1개의 TV채널과 6개의 라디오채널을 보유

* ARD 10개 회원 방송사(송출 지역): ① BR(바이에른), ② DW(전 세계), ③ HR(헤센), ④ MDR(작센/작센-안할트/튀링엔), ⑤ NDR(함부르크/니더작센/슐레스비히홀슈타인/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⑥ RB(브레멘), ⑦ RBB(베를린/브란덴부르크), ⑧ SR(자를란트), ⑨ SWR(라인란트 팔츠/바덴뷔르템베르크), ⑩ WDR(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통일 후 방송사 통폐합 관련 사항,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동독의 프로그램 현황, 디지털방송 유휴주파수 활용방안 등을 질의

- David Biesinger 정보국장은 통폐합 후 인력선발 기준 및 동독 방송인의 비율, 동독방송인 재교육프로그램의 부재와 그 이유, 소수만 남아있는 동독의 프로그램 현황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통일 직후 동서독 방송인 통폐합 관련】

○ (인력선발 과정) 방송국의 통폐합과정에서 인력선발을 위해서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슈타지*에 대한 협력 정도를 심사하여 선발

* 슈타지(Stasi) : 1950년부터 1990년까지 존재했던 독일민주공화국의 정보기관. 첩보 및 방첩, 국민에 대한 감시를 담당했으며,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정부와 함께 해체되었다.

○ (동독 방송인들의 비율) 통일 후 25년이 지나 당시의 정확한 비율을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절반정도라고 추정되고, 특정한 활동상 제약은 없었음

* 현재는 모두 은퇴한 상태

- RBB Inforadio의 경우 임원들이 모두 서독출신이나, 이러한 구성은 다양한 시각을 방송사 경영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함

- 일부 프로그램(예: 청소년 대상프로그램)의 제작진에는 동서독 출신 방송인이 고루 포진되어 있어 제작방향에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고 있음

○ (동독 방송인 재교육) 특정 재교육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재교육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가 동독 체제의 열등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었음

- 동독출신 방송인들은 국가주도 방송시스템에서 자유주의 방송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했으나,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여 비교적 적응이 쉬웠음

- (동서독 출신 방송인들간 갈등) 통일 직후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명시적인 갈등은 거의 없으며, 다만 관점의 차이(예:우크라이나 사태 보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

* 2014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미국 및 EU)-친러시아 세력간 다툼으로 발생한 크림반도 독립 움직임 및 이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사태

- 중부독일방송(ORB)과 자유베를린방송(SFB) 통합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방송을 지향하는가를 기준으로 방송인들의 잔류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마찰이 적었음

【현재 유지되고 있는 동독의 방송프로그램 사례】

- 과거 동독에서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의 현재 존재에 대해서는, 통일 후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될 정도로 장수한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소수 사례*만 있음

* 매년 방영되는 베를린 장벽 붕괴 관련 프로그램, 동독의 다큐멘터리, 유아프로그램, 범죄 수사물(우리의 수사반장 류) 등

【기타분야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

- 방송 외에도 교회가 동서독 사회통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업과 노동조합도 서로 협력하며 특히 동독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사회적 문제들을 잘 해결해왔음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유희주파수 활용】

- 독일은 2008년에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완료하였으며, 유희주파수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파악이 필요함

【면담 관련 사진자료】



<RBB 방송국 전경>



<RBB 방송국 시설 견학>



<RBB 정보국장과의 면담>



<면담 후 RBB 본사 건물 앞에서>

2.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

□ 일시/장소 : 2014.9.2 18:30~20:30, 베를린 시내 음식점

□ 면담자 :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 교수

< 베를린 자유대학 개요 >

-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있는 공립 대학교로서 1948년 공식적으로 설립
 - 근원은 1810년 설립된 베를린훔볼트 대학교(Humboldt University of Berlin)로서 훔볼트 대학교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이 동서로 분할되면서 동독에 속하게 되자 이때 서독 지역으로 넘어온 교수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남북방송통신교류를 위한 활동과 대표단의 이번 독일 방문목적을 설명하고, 동독인들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존재 여부, 동서독 간 빠른 통합의 비결, 독일의 사례가 한국통일 과정에 주는 시사점 등을 질의
- 이은정 교수는 통일 정책과 관련한 실무적 경험의 중요성, 동독인들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그 이유, 빠른 통합에 유리했던 독일 통치체제 특성, 꾸준한 대화와 통일에 대한 감각의 필요성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통일 정책 관련 실무적 경험의 중요성】

- 통일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는 정책 수립만큼 실무 경험도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참석자 본인이 기획한 주제를 갖고 참가하는 통일연수프로그램 (통일부 주관)이 있으며 방통위측의 적극적 참여를 바랍

【동독인들에 대한 재교육】

- 통일 후 독일인들이 동서독인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스스로도 자신들을 동독인 혹은 서독인으로 별도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불릴만한 것이 거의 없음

【동서독 간 빠른 통합의 비결】

- 동서독 간 사회통합이 예상보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연방제 정치구조에 있다고 생각함. 한국의 남북과 다르게 큰 단위의 대립이 발생하지 않았고 각 연방 주가 경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통합이 될 수 있었음
-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동독 출신의 대통령과 총리가 재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비해 국민의 생각이 개방적임
- 통일 과정에서는 약자(북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독일의 경우 동독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정책시행으로 동독지역이 빠르게 발전하여 동서독 경제수준이 대등해졌고 사회통합이 촉진됨

【동독 체제에 대한 향수】

- 동독 체제에 대한 향수는 세대보다는 개인이 동독체제에서 받은 혜택의 여부에 따라 다름. 또한, 통일 이전 동독의 청장년층에 비해 80년대 이후 출생한 동독인들이 어린 시절의 향수로서 동독 체제를 더욱 그리워하기도 함

【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조언】

-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과 북한 간에는 꾸준한 대화가 필요하며 독일 통일 당시에도 동서독 정치인들이 통일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갖고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3. 신탁청 前 이사

- 일시·장소 : 2014. 9. 3(수) 10:00~12:00, 베를린대사관 회의실
- 면담자 : Ken-Peter Paulin 박사(신탁청 前 이사)

〈 신탁청 개요 〉

- 신탁청(Treuhandanstalt : THA)은 1990년 6월 17일 동독 공산정권 붕괴 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동독 국민의회(Volkskammer)가 의결한 신탁법(Treuhandgesetz)에 따라 설립
- 독일 통일 전인 1990년 7월 1일 당시 신탁청에 속한 기업의 수는 약 8,500여 개 (이후 약 14,600여 개로 증가), 고용인원 수는 약 4백만 명
- 주요과제인 위탁된 국민재산의 이용과 사유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수행한 후 1995년 1월 1일에 ‘연방신탁후속특별관리청’으로 개명되고 조직 및 업무분야가 개편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신탁청의 공공자산 처분과정, 적자 발생의 원인, 한국의 통일을 위한 조언 등을 질의
- Ken-Peter Paulin 박사는 신탁청의 주요업무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최초예측의 오류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유의점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신탁청의 동독 공공자산 처분】

- (신탁청의 주요업무) 정당, 정부조직 등에 속했던 공공자산을 민영화 및 매각하여 재분배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기관으로, 통일 당시 동독의

공공자산이 서독에 비해 지나치게 부족하여 이를 확장하는 것이 당시 신탁청의 주요업무였음

-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며 여러 어려운 점이 발견될 것임을 조언

<1994년 말 신탁청의 활동결과>

활 동	건 수
민영화	15,102
재민영화	4,358
소민영화(상점, 음식점, 호텔, 약방, 영화관)	25,030
부동산	46,552
총민영화	91,042
청산	3,718

- (처분과정에서의 어려움) 공공자산 처분과정에서 기존 공공자산을 관리하던 지자체와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각 동독 지자체의 자산이 지나치게 부족하였음. 또한, 부동산과 같은 경우 자본주의 체제에 맞게 변환시켜야 했지만 매매계약의 관행 및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음
- 처분과정에서도 많은 오류와 실수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동독의 정치자금 조달기관(KOKO, 약 70억 마르크 보유), 해외무역청(AHB, 약 243억 마르크 보유) 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경우 막대한 보유자산에도 그 위치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실체가 불명확하여 청산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

- (예측오류의 원인) 공공자산 처분과정에서 예측과 다르게 적자가 발생한 주요원인은 애초 처분시 발생할 손익에 대한 예측치가 부정확한 동독 정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에 예측에 오류가 많았음
- 그 결과 정부가 동독지역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해야 했고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
 - * 신탁청 설립 초기 약 1조 5,000억 마르크의 매각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2,560억 마르크의 막대한 적자를 입음
- (신탁청 해체) 신탁청은 공공자산의 민영화라는 업무의 특성상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설립부터 해체까지 지속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비판대상이었고, 결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해체가 결정됨
- (공산당 소유재산 처리) 먼저 공산당 소유 재산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국가소유로 남는 것이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소유자가 명확한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귀속시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으면 경매 등의 다른 방식을 모색함

【통일한국을 위한 조언】

- 조속히 한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독일의 경우와 같이 통일이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면 통일 후 통합작업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임

【면담 관련 사진자료】



<공공자산 처분 관련 프레젠테이션 청취>



<신탁청 주요업무내용에 대한 답변>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감사인사>

4.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MABB)

□ 일시·장소 : 2014. 9. 3(수) 15:30~17:00, MABB 회의실(베를린 소재)

□ 면담자 : Hans Hegge 청장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MABB) 개요 >

-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 미디어청은 관련 법률에 의해 독립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주요직무로는 민영 방송국 설립허가,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주파수 관리, 디지털 전송기술 개발, 지역 TV방송국 지원을 통한 미디어 다양성 촉진 및 교육 지원업무 등이 있음
- 의사결정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미디어위원회(Media Council, 3명은 주의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위원은 자원봉사자)와 미디어청장(Director)이 수행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동서독 방송통폐합 과정에서의 시설 및 인력 활용문제, 통일과정에서의 방송 역할, 민영 방송사업자 허가, 유희주파수 활용 등을 질의
- Hans Hegge 청장은 방송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동서독 방송시스템의 변화, 동독 방송인 채용과정, 통합 후 방송사 임원진 구성, 동서독간 중요한 연결고리로서의 방송, 민영 방송사업자의 상세한 허가기간,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유희주파수 활용 논의 상황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주미디어청의 통일 전후 개관 - 동서독의 방송통합과 방송설비 활용 문제】

- (동서독 방송시스템 차이) 동독은 중앙 집중, 서독은 주 단위 분산방식이었으며, 통일 후에는 동독지역에서도 주 단위 분산방식으로 개편이 이루어짐

- 동독 자체의 변화를 기다리기에는 통일의 속도가 빨라서 결과적으로 서독의 시스템이 동독에 그대로 적용됨
- (동독 방송인 대량해고) 주된 원인은 기존 동독 방송시스템의 비효율, 소수 인원으로 운용이 가능한 신형설비의 등장이었고, 해고과정에서 동독 체제에 대한 협력 정도가 고려됨
- (통합신설된 방송사의 임원진) 신설 방송사의 임원진 대부분은 서독 출신 방송인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동독 고위직 방송인 대부분이 정부와 밀접한 관계였다는 점에서 신설된 방송사의 정책방향 수립에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이었음
- (동독 방송설비 재활용) 동독의 방송설비는 지나치게 낙후되고 노후화된 데다 신형설비의 등장으로 재활용 가치가 낮았으며, 동독 방송인들이 신형 설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역할】

- 분단 당시 공중파 방송은 서독의 동독주민에 대한 유일한 전파수단이었으므로 매우 중요했고, 동독정부에서도 서독 공중파 방송 시청을 강력히 제재하지 않았으며 제한된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체제 안정을 도모함
- 현대에는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도 통일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오히려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재가 독일 통일 당시보다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더욱 쉬울 수 있음

【동독 방송인력 채용 관련】

- 통일 전 동독의 방송사는 체제 순응적이고 사상이 검증된 인사들을 위주로 채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채용된 이력이 있을 경우에 본인이 자유주의 체제를 지지하여도 통합된 방송사 경영진으로 채용하기 어려웠음

【일반정책 - 700Mhz 유희주파수 활용 관련】

- 독일에서도 기존 아날로그 대역인 700Mhz 유희주파수 활용에 대한 여러 차례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현재에도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임
- 방송과 통신 분야 간 경쟁이 이루어지는 점도 한국의 상황과 유사

【일반정책 - 민영방송 허가기간】

- 지상파 방송의 경우 기본적인 허가기간은 7년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때에는 7년이 자동적으로 갱신됨. 총 허가기간이 14년이 되면 다시 경쟁을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함.

【일반정책 - UHD 방송 관련 계획】

- 독일정부도 UHD 방송과 관련된 문제는 인식하고 있으나 낮은 UHD 수신기 보급률과 UHD 호환 프로그램 제작 비활성화 등의 이유로 아직 정부차원의 공식적 계획은 없음

【면담 관련 사진자료】



<MABB 청장과의 면담>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감사 인사>

5. 연방네트워크청 라이프찌히

- 일시 · 장소 : 2014. 9. 4(목) 11:00~12:30, 지청 회의실(라이프찌히 소재)
- 면담자 : Eckhard Stange 지청장 등 3명
- 기관개요

< 연방네트워크청 개요 >

- 연방네트워크청(Bundes Netzagentur)은 1998년 1월 정보통신 부문의 자유화 촉진, 정책 입안과 규제 감독의 분리를 목적으로 발족된 독립규제기관으로서 주요 직무로는 정보통신 관련 경제 규제, 통신 법규 발표 및 주파수 규제 등이 있음(10개 지청이 존재)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동서독지역 방송통신 인프라 수준, 통일 전 동서독 주민간 통신 가능성, 통일 후 동독지역 통신망 투자문제, UHD TV 주파수 할당문제 등을 질의
- Eckhard Stange 지청장 등은 대등한 수준인 동서독지역 방송통신 인프라 현황, 통일 전 동서독 주민 간 통신의 애로사항,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동독의 통신망 상황, 인접국가와 협의 중인 UHD TV 주파수 할당문제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동서독 방송통신 인프라 수준 비교】

- 서독과 비교한 현재 동독지역의 방송통신 분야 인프라, 서비스 수준은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음

【통일 전 동서독 주민간 통신이용 관련】

- 통화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동독지역에 가구당 유선전화선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았고, 동독주민이 서독주민과 통화하려는 경우 관련 관청의 허가, 감청 등 제약이 있었음

【통일 후 동독지역 통신망 투자 관련】

- (도이치텔레콤 사례) 통일 직후 '92~'94년 사이에 동서독 전체 통신 분야의 디지털화를 진행하였고, 동독의 낙후된 유선통신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했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동독지역은 기본적 통신망인 유선전화망의 보급률이 낮아(예: 1건물에 유선전화 1대) 대규모 추가개설이 필요했음

【일반정책사항 - UHD TV 방송주파수 할당 관련】

- UHD TV 주파수가 할당될 영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체코슬로바키아, 터키 등 인접국가의 주파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련 국가와 협상 중임

【면담 관련 사진자료】



<연방네트워크청 라이프찌히 지청장과의 면담>



<면담 후 선물 교환>



<지청 건물 앞에서>



<면담 후 단체사진>

6. 중부독일공영방송(MDR)

- 일시 · 장소 : 2014. 9. 4(목) 13:30~15:00, MDR 회의실(라이프찌히 소재)
- 면담자 : Martin Kroeber 법률담당자

< 중부독일공영방송(MDR) 개요 >

- MDR은 독일 중동부에 위치한 3개 주(작센 주, 작센-안할트 주 및 튀링엔 주)의 공영 방송국으로서, 2014년 8월 현재 1개 TV 방송 및 9개 라디오 겸 디지털 방송을 제공 중이며, 독일 제1공영방송(ARD)의 회원사임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동서독 통합과정에서의 인력 및 시설 변화, 동서독 방송인 통합노력, MDR과 ARD내 타방송사와의 차이,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방식, 현재의 재원조달 방법 등을 질의
- Martin Kroeber 법률담당자는 일괄해고 후 진행됐던 동독인력 채용 과정, 기존의 방송국 시설 처분방식, 동독지역 방송인 MDR의 특성, 방송사 자체 평의회를 통한 사장선임 방식, 재원조달 방식의 변화과정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통합과정에서의 인력 및 시설 변화】

- (동독인력 채용) 기본적으로 동독방송인 전원을 해고한 후 통합방송국 설립시에 입사지원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 현재 MDR 전체 직원 중 동독출신은 약 10% 정도로 추정

- (통합 전 시설 처분) 기존 방송국의 시설 대부분은 지방의 소규모 스튜디오 정도였으며 베를린으로 옮기거나 매각

【통일 후 동서독 방송인 통합노력】

- MDR도 설립 시부터 동서독 방송인력 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프로그램 제작시 동서독 방송인 간 일대일 파트너십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함. 공식적으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았고, 선별채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재교육이 이루어짐

【ARD 내 타방송사와의 차이】

- 동독지역 기반 방송으로서 동독지역 정서를 반영한 프로그램, 통일 전 동독에 방영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포맷의 프로그램 방영, 동독지역의 인기 연기자 중용 등을 함

【일반정책 - 공영방송 사장선임】

- 공영방송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 및 오락 제공, 충실한 보도 등의 헌법적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MDR의 사장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방송위원회를 통해 선출

* 정치권(33%), 주의회, 경제계, 노동조합,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이 추천한 각계각층 인사 45명으로 구성

【재원조달】

- 공영방송은 국가나 정치권, 정당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정비되어 있음

- 전체 수입의 95%가 수신료이며, 월 17.98 유로 (우리 돈 3만원 정도)
- 2012년까지는 수신료 징수 대행기관에서 수신료를 징수해왔으나 비효율 등 문제가 지적되어 해체되고, 2013년부터 가구별로 TV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서를 발부

【면담관련 사진자료】



<MDR 법률담당자와의 면담>



<면담 후 선물 교환>



<MDR 본사 건물 앞에서>



<면담 후 단체사진>

7. 독일 제2공영방송(ZDF)

- 일시 · 장소 : 2014. 9. 5(금) 13:30~15:30, ZDF 회의실(마인츠 소재)
- 면담자 : Ralf Zimmermann von Siefert 뉴스 보도국장

< 독일 제2공영방송(ZDF) 개요 >

- 제1공영방송(ARD)의 방송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1961년에 서독 연방조약에 의거해 설립. 유럽 최대 방송사업자 중 하나로 독일 전역에 TV방송을 송출하고 있으며, 디지털 TV 서비스, VOD, IPTV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0 주요 내용 요약

- 허원제 부위원장은 통일 前 동독지역의 서독방송 시청 활성화를 위한 방송사 차원의 정책, 동서독의 체제선전방송, 통일을 위한 ZDF의 정책, 방송사 통합 후 동독 방송인의 채용문제,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위원회 구성 등을 질의
- Ralf Zimmermann von Siefert 뉴스 보도국장은 서독방송 시청 활성화에 대한 과거 ZDF의 입장, 동서독의 체제선전 프로그램 성패, 사회통합을 위해 편성되었던 프로그램, 동독 방송인 채용과정에서의 어려움, 사회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사장 선임 위원회 등을 설명

□ 세부 면담내용

【통일 전 서독방송 시청 활성화 정책】

- (방송사 정책) 방송사 차원에서의 별도 정책은 없었으며 당시 폴란드 등 동유럽권에서 발생했던 정치적 격변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것만으로도 동독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 (동독인들의 서독방송 시청) 동서독의 방송 송출 시스템이 달랐지만* 동독인들에 따르면 화질 및 소리가 선명하지는 않아도 시청은 가능했으며, 오히려 통일 이후에는 위성안테나 보급 등으로 인한 방송매체의 다양화로 ZDF의 시청률이 하락

* 서독은 PAL(Phase Alternation by Line) 방식, 동독은 SECAM(Sequential Couleur A Memoire) 방식으로 송출 시스템이 달랐음. PAL 방식은 서독의 Telefunken사가 개발한 방식으로 서독,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 새로 컬러 방송을 시작하려는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용하였고, SECAM 방식은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으며, 프랑스 언어권 국가와 동구권 국가에서 채용

【통일 전 동서독의 체제 선전 방송】

- 동독에는 중앙집권적 방송체제를 활용한 다양한 체제 선전프로그램이 있었음. 반면, 서독에도 체제 선전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주 단위의 방송 체제에서 다양한 의견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통일성이 없어 선전효과가 낮았으며 대부분 실패

【통일을 위한 ZDF의 기여】

- 통일 전부터 ZDF는 상반된 성향의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빌리브란트의 동방정책**에 기여

* 동서독의 현실을 비교한 프로그램으로서 보수적 성향의 ‘켄짜이헌D’, 진보적 성향의 ‘ZDF 마가진’이 대표적

** 1969년 서독 시민당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추진한 동구 공산권과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외교정책. 동독을 정식국가로 승인한 나라와는 외교관계를 갖지 않기로 한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며, 루마니아·유고슬라비아와 국교를 회복하는 등 공산권 국가들과의 외교를 적극 추진

【방송사 통폐합 후 동독 방송인의 채용】

- 통폐합 후 프로그램 제작에 동독 방송인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의 진실 추구, 사명감 등 기본적 의식이 있었던 일부 동독 방송인들을 채용

【동서 지역에 따른 방송선호도 차이】

- 현재 서독지역에 비해 동독지역의 시청률이 낮으며, 특히 오락, 교양 프로그램 등에 비해 뉴스의 시청률이 낮음

【시청자 정서에 대한 피드백】

- 공영방송의 주요과제인 사회통합 달성을 위해 질적인 측정방법(시청자 특성, 시청프로그램 종류 및 시청이유)을 통해 시청자 정서를 파악하고, 동서독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함
- 결과 피드백을 반영하여 통일 이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예:Blickpunkt(ViewPoint))을 방영해오고 있으며, 동독인사와 관련된 뉴스를 보도할 때 해설자막을 덧붙이기도 함

【공영방송의 방송제작 및 편성상 특징】

- 독일의 공영 TV들(ARD, ZDF)이 같은 시간대에 동일한 프로그램(예 : 아침 뉴스, 정오뉴스)을 방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사는 경쟁보다는 비용절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상호 공동제작 및 방영을 실시하기 때문

【공영방송사의 정치적 성향】

- ARD가 진보적, ZDF가 보수적이라는 평이 있으나, 과거에만 해당되며 '12~'13년 이후로는 방송, 언론의 정치적 독립화가 가속화되어 자율적으로 경영

【공영방송사 사장 선임 위원회】

- ZDF의 사장 선임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추천한 77명으로 이루어진 TV 위원회(Fernsehrat)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외에도 위원회는 4년의 임기 동안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 시청자 불만 청취, 예산 승인 등의 기능을 함
- 위원회는 각 연방주(16명), 연방정부(3명), 하원의회(12명), 가톨릭·신교·유대교 교회(5명), 노동·환경·자선단체 등 사회단체(26명), 교육·과학·예술 분야(16명)에서 각각 추천한 인사로 구성

【면담 관련 사진자료】



<ZDF 방송국 전경>



<ZDF 뉴스보도국장과의 면담>



<면담 후 선물 교환>



<면담 후 단체사진>